

CEO Information

2010. 7. 28. (제766호)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 교육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

목차

요약

I. 급증하는 청년실업

II.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III. 정책 제언

작성 : 손민중 수석연구원(3780-8235)
serisohn@seri.org
류지성 연구전문위원
박준, 이찬영, 문외솔 수석연구원

《 요 약 》

최근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2010년 상반기 청년 취업애로층(실업자,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이 116만 2,000명에 달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취업애로층을 수정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은 23.0%를 기록하여, 청년 중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009년 기준 청년실업자(25~29세)의 단기소득상실액은 4조 9,000억원이며, 실업 장기화로 생애소득이 감소할 경우의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9년 기준 25~29세 청년실업으로 약 1조 5,32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성장의 토대가 약화되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첫째,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청년층 취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추구경쟁이 입직연령과 취업 시 최소요구임금 수준을 높이고 구직자의 눈높이도 상승시켜 청년층 취업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직업의식 교육의 강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실용 중심의 직업관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진학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보장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하고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숨은 일자리'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청년층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고용친화형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대학은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개설하고, 장기인턴십 등 산학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교과과정도 '산업현장 적합도'를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 정부도 국가산업단지에 대학을 유치하여 산학일체형 인재육성을 꾀하고 '도심형 고급직업대학'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연계형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직원 학자금 지원을 적극 도입하도록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 급증하는 청년¹⁾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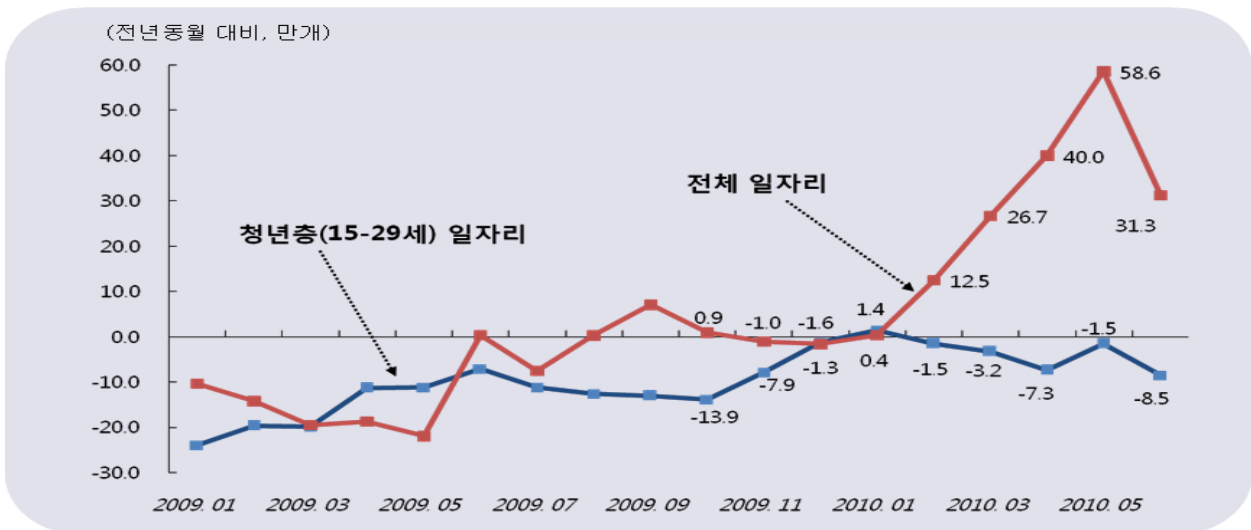
청년 체감실업률은 23%로 청년 중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

□ 2010년 상반기 중 일자리가 전년동기 대비 28만 3,000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실현되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일자리는 3만 4,000개 감소해 부진한 모습

- 2010년 6월 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1만 3,000개 증가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8만 5,000개나 감소

· 6월의 청년층 일자리 감소 폭은 2009년 10월(13만 9,000개 감소)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전체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률²⁾은 최근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³⁾

¹⁾ 본 보고서는 한국의 청년층을 노동부, 통계청 등이 주로 사용하는 15~29세 연령층으로 정의

²⁾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가'를 판단하는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도출하고, 각 연령대의 고용률은 각 연령대의 취업자를 각 연령대의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계산

³⁾ 외환위기가 당시 50대에 타격을 주었다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녀 세대인 청년층과 30대의 고용사정을 악화시킴

• 2009년 1/4분기 청년층 및 30대 고용률은 각각 39.9%와 71.0%를 기록하여, 2007년 4/4분기 대비 2.2%p와 2.6%p 하락⁴⁾

• 가장 최근인 2010년 2/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0.8%로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4/4분기 42.1%)을 하회

□ 2010년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청년실업률(8.6%)보다 2.7배 높은 23.0%로 청년층의 약 4분의 1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경험

- 청년 취업애로층⁵⁾은 실업자(37만명)의 3.14배인 116만 2,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던 2009년의 115만 9,000명을 상회

• 전반적인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취업애로층이 확대되고 있어 청년 고용부진이 심각

최근 청년실업률과 청년층 체감실업률 비교

(단위: %, 만명)

구분	2009년	2010년 1~6월
청년실업률(청년실업자)	8.1 (34.7)	8.6 (37.0)
청년층 체감실업률(청년층 취업애로층)	22.9 (115.9)	23.0 (116.2)

주: 1) 청년층 취업애로층을 체감실업자로 간주하고 계산

2)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청년층 취업 애로층(실업자+비자발적 단시간 취업자+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기타)을 수정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기타)로 나누어서 도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삼성경제연구소가 계산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정의

▶ 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 체감실업률 = $\frac{\text{취업애로층}}{\text{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기타+쉬었음}}$
--	--

⁴⁾ 2009년 1/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구직기간 4주 통계 작성시점(1999년 3/4분기) 이래 최저치

⁵⁾ 2010년 상반기 취업애로층 중 취업준비생이 40.0%(46.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에는 각종 고시 준비자가 포함되어 있어 양질의 인력이 특정 직업 구직에 몰리는 등의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

단시간 내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은 기대난

□ 한국 청년 실업문제는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되는 경기순환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 한국은 졸업 후 5년의 NEET 인구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

·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정규학업을 마친 후 5년 내에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

- 또한,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NEET 인구비율이 상승세를 나타내 향후 구조적인 청년 고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 반면, 대다수의 국가는 NEET 인구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주요국 청년들의 학교 졸업 후 시기별 NEET 인구비율

(단위: 비중 %)

졸업 후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1년	36.8	54.0	29.5	40.7	69.6	63.7	51.2	30.6
3년	28.5	37.9	42.6	8.7	56.3	47.6	36.3	22.9
5년	36.8	17.9	22.4	19.6	33.6	35.6	31.0	19.8

주: 청년층은 15~29세 기준

자료: OECD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 청년층 고용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측면, 즉 예비구직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

-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

· 경기침체기에는 고용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유효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숙련인력의 양성이 불가능

- 청년 인턴제 등 기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단기적 일자리 확대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으나 중장기적인 고용 확대에는 미흡

Ⅱ.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1. 청년실업의 경제적 비용

청년실업의 장기적인 총 소득상실액은 23조원

□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여 생애소득 감소를 유발

- 취업이 지연되어 근로소득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의 장기화로 생애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

□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 가정)의 장·단기 소득상실분을 추정한 결과, 장기소득상실분은 단기소득상실분의 약 4~5배

- 2050년까지 한국의 연령별 가구소득분포 전망을 이용⁶⁾하여 2009년 기준 25~29세 청년실업자의 장·단기 소득손실을 계산

· 단기소득상실분은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동 연령대의 취업자 소득

· 장기소득상실분은 실업을 겪지 않은 취업자에 비해 생애 전 기간(재취업부터 60세까지)에 걸쳐 15%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⁷⁾ 해 계산

- 전체 25~29세 청년실업자⁸⁾(실업기간 1년 가정)의 단기소득상실분은 4조 9,000억원이며 장기소득상실분은 23조원 수준

⁶⁾ 성명재(2005)가 추정한 가구(2인 이상)소득의 60%만을 청년층 소득으로 간주했는데, 이는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맞벌이 가구 소득의 약 40%를 차지한다(통계청, 2010)는 점을 반영(성명재(2005).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⁷⁾ 근로자가 재취업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해도 복구되지 않는 임금 하락 폭이 15% 내외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활용 (Ruhm, C. (1991). Are workers permanently scared by job displacements?; Jacobson, L., LaLonde, J. R. & Sullivan, G. D.(1993).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⁸⁾ 2009년 25~29세 청년층 연평균 실업자 규모는 각각 3만 9,000명(25세), 4만 2,000명(26세), 4만 5,000명(27세), 3만 9,000명(28세), 3만 5,000명(29세)

- 2009년 현재 25세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 가정) 1명의 단기소득 상실분은 2,380만원이며 장기 소득상실분은 1억 2,200만원 수준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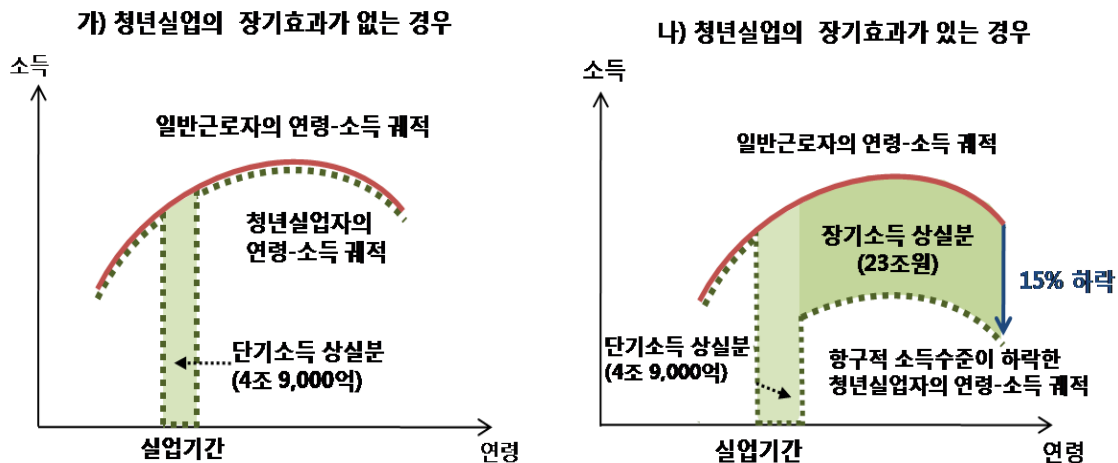
2009년 청년실업자의 장·단기 소득상실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단기소득상실분					장기소득상실분				
실업기간/연령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1년	23.8	24.5	24.7	24.9	25.1	122.2	119.2	116.1	112.9	109.9
2년	47.9	48.8	49.2	49.6	50.0	118.7	115.5	112.4	109.2	106.2
3년	72.2	73.4	74.0	74.6	75.2	115.0	111.9	108.7	105.5	102.4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의 장·단기소득상실분



자료: 김종면 (2006).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재정포럼』. 조세연구원.을 토대로 재작성

장기실업에 따른 세수차질액은 1조 5,320억원

- 청년실업에 따른 소득세 수입의 손실과 부모세대의 노후보장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초래

- 2009년 당시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 가정)의 장기 소득세 상실액은 단기 소득세 상실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⁹⁾ 2009년 25~29세 실업자 중 20%(약 4만명)만 실업의 장기효과(실업기간 1년)에 노출된다고 해도 4조 6,000억원의 장기 실업비용이 발생

- 2009년 25세의 청년실업(실업기간 1년 가정)으로 근로소득세가 95만원 감소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800만원 내외의 세수가 감소
- 2009년 25~29세 실업자가 약 2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조 5,320억원의 장기 소득세수가 감소¹⁰⁾
- 한편, 청년실업으로 청년층 부모세대의 노후보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비용이 증가

2009년 청년실업자의 장·단기 추정소득세 상실액

(단위: 십만원)

구분	단기 추정소득세 상실액					장기 추정소득세 상실액				
실업기간/연령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1년	3.3	3.4	5.0	5.0	5.1	80.1	79.7	75.0	74.5	72.3
2년	8.5	8.7	10.3	10.4	10.5	79.6	79.3	73.1	72.5	71.5
3년	14.1	14.3	16.0	16.1	16.3	75.8	75.4	69.2	68.6	67.9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현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 및 사회불안 가중

□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약화

-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청년층 노동력의 질적·양적 수준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 미취업의 장기화로 개인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이 약화되고 초기 직장생활을 통한 학습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인적자본능력이 저하
 - 한편,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로 기존 산업인력의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¹¹⁾

¹⁰⁾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25~29세 실업자 약 2만명 중 20%만이 장기실업효과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는 세수차질액이 3,064억원

¹¹⁾ 특히, 제조업은 특성상 작업장 교육(on-the-job training) 등 암묵지 전달이 중요하여 청년층의 고용비중 감소는 숙련기술의 단절로 직결

- 한편, 청년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소득상실은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내수가 위축

- 25~29세 청년실업자가 1년간 단기소득상실을 경험하거나 이들 중 20%가 장기소득상실을 경험할 경우, 연간 민간소비는 0.7% 감소¹²⁾

□ 청년층의 장기간 미취업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취업불안이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무기력을 나타내는 사회병리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

- 25~29세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명, 십만명당) 추이:
11.2명(2000)→ 14.2명(2002)→ 15.3명(2004)→ 15.5명(2006)→
25.2명(2008)

- 장기적으로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은둔형 범죄가 발생할 우려

청년실업의 파급효과



¹²⁾ 2009년 민간소비지출액이 520조원, 25~29세 청년층이 1년 동안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단기소득 상실액 규모가 4조 9,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75%(평균소비성향)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여 도출

2.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

청년층 일자리의 미스매치

□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중 하나인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취업자 대비 10.3% 수준

- 2009년 대학졸업자는 54만 7,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3만 9,000명

· 대학졸업자 중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 취업

- 최근까지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가 늘지 못하고 취업자 대비 비중도 하락세

대학(원) 졸업자와 이들 중 취업자 및 대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졸업자	527,876	547,795	561,203	560,632	558,964
취업자	317,593	369,380	389,157	390,180	387,487
대기업 정규직 신규취업자	58,474 (18.4)	45,813 (12.4)	45,010 (11.6)	51,464 (13.2)	48,955 (12.6)

주: 1) 여기서 대학졸업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각종대학, 석박사 일반 대학원을 포함

2) () 안은 취업자 대비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 비중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취업직무와 교육의 일치도는 계열학과 간 차이가 커서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

- 교육계열 전공자들은 현 직무와 대학교육 간의 일치도가 89.3%로 매우 높은 반면,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44.5%에 불과

취업직무와 대학 전공의 일치도 비교(2009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학	예체능
전공일치 취업자	115,462	2,907	30,226	7,877	26,720	8,029	19,190	20,513
전공 일치도	71.0	44.5	60.7	89.3	71.8	71.1	88.6	75.2

주: 여기서 대학졸업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각종대학, 석박사 일반대학원을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기업의 43.3%는 대졸 신입사원 업무성취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산업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괴리라고 지적¹³⁾

고학력 추구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보임금이 증가

□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입직연령과 취업 시 최소요구 임금(유보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눈높이도 높아져 청년층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과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진학률을 끌어올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현재는 청년실업 양산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

· 대학진학률: 33.2%(1990년)→ 51.4%(1995년)→ 68.0%(2000년)→ 82.1%(2005년)→ 83.8%(2008년)→ 81.9%(2009년)

-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인력 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경쟁이 지속

¹³⁾ 한국경영자총협회 (2006). "대졸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대학졸업장' 획득 경쟁(sheepskin effect)

- ▷ 양의 가죽을 의미하는 sheep-skin은 졸업증서(diploma)라는 의미도 있음
 - 과거에 대학졸업장을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에서 유래
- ▷ 대학졸업장을 획득하는 것이 자신만의 기술이나 경험을 쌓는 것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안정된 직업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대학 졸업장이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상황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신호(signal)를 발신하기 때문
- ▷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가 정립한 이론

- 대졸(3년제 포함) 청년층의 39.3%가 재학 중 휴학경험이 있고 일반 대학의 재학기간이 5년 3개월에 달해 입직연령이 상승¹⁴⁾
- 과거에 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고학력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는 눈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높은 보상을 기대
 - 일반 대졸자의 2007년 임금은 2002년 대비 27.4% 상승했지만 유보임금은 동기간 중 47.2% 상승하여 눈높이가 상승했음을 시사

청년층 유보임금과 실제임금의 비교

(단위: 만원, %)

구분	일반대졸		전문대졸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실제임금	1,726	2,199	1,196	1,617
유보임금	2,004	2,949	1,459	2,623
충족률(실제임금/최소요구임금)	86.1	74.6	81.9	61.6

주: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구직자의 최소요구임금으로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03-05-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2008). "대학생 직업선택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노동통계.

¹⁴⁾ 대졸 청년층의 최종학교 졸업 소요기간은 평균 4년이며 4년제 졸업생의 경우 졸업 소요기간은 평균 5년 3개월로 조사 (통계청(2009). "2009년 5월 청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Ⅲ. 정책 제언

기본방향: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

□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 해소의 기본 전제이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 녹색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력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 중소기업 인력난 등은 일자리가 있어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2010년 3월 말 현재 56만 1,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중¹⁵⁾

□ 현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 상황과 괴리된 채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교육시스템

- 학생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대학만 보내고 보자는 학교와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의식이 실종

• 2009년 현재 15~18세 청소년의 42.1%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택¹⁶⁾

- 대학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은 고졸인력 채용을 줄이고, 이는 다시 대학진학열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형성

- 학생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요구임금 수준을 올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¹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3. 31.).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 보도자료.

¹⁶⁾ 통계청, KOSIS.

-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해 청년층이 명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
 -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조기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은 기업의 니즈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
 - 정부는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1. 실용 중심의 직업관 교육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조기 개입할 필요

- 한국은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진학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적합한 교육수준에 대한 지도가 중요
 -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과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 등으로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현재 81.9%에 이름
 - 한국 대학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작은 반면, 수업료는 높은 사실을 직시해 합리적으로 대학진학 여부를 선택할 필요
 - 2007년 현재 한국의 25~34세 평균 고졸자 임금 대비 대졸자 임금의 비율은 1.25로 OECD 평균(1.38)을 하회¹⁷⁾
 - 2007년 현재 한국 4년제 대학의 연간 수업료는 국공립이 4,717달러, 사립이 8,519달러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¹⁸⁾

¹⁷⁾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¹⁸⁾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청소년이 직업선택 기준으로 안정성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초등교육 단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 자립심, 기업가 정신 등을 교육
 - 정부는 중학교 평가 기준으로 '졸업생 진로의 다양성' 항목을 포함시켜 전문계고 진학 실적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
 -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수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수습생 중 성적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선진국의 실용 중심 교육제도

- ▷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년별로 기업가 정신 교과목을 설치해 운영
 - 미국의 Mini-Society(初), Making a Job(中), Enterprep(高) 등이 대표적
 - 영국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일찍 실시할수록 수용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모토 아래 조기 교육에 집중
- ▷ 독일은 수습제도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실업을 완화
 -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공공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동안 폭스바겐, 지멘스 등의 기업에서 수습생으로 수련
 - 수습생이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고숙련 근로자로 대우받고 대기업에도 취업
 - 2009년 독일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1.0%로 OECD 평균(16.4%)을 하회

청년층을 위해 '숨은 일자리'를 발굴

- 2009년 하반기 현재 중소기업은 농어업 및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도 약 15만 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리, 사무, 연구개발, 영업, 기술직 등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약 8만 5,000명으로 추산¹⁹⁾
 - 각종 기능보유자, 기계조작원, 조립원 등 고졸 기능인력은 약 6만 7,000명이 필요
-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취업백서』를 발간해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우량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소개
-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中小企業白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부족
 - 일본정부는 1963년부터 매년 『中小企業白書』를 발간하여 중소기업 동향과 대책을 의회에 보고 → 건실한 재무구조, 개방적 조직문화 등 경영혁신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는 중소기업을 자세히 소개
 -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우량 중소기업을 홍보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기업 중심의 직업의식을 개선
-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
-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구직자를 데리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지방 強小기업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 중소기업청이 방문기업을 선정하고 참여할 청년구직자를 모집해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

¹⁹⁾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일본의 지역매력발견 버스투어

▷ 오사카 부 야오 시의 레이저金型 전문기업 LASERCK(종업원 66명, 자본금 5,000만엔)는 '지역매력발견 버스투어'를 통해 청년 인재를 채용

-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지역매력발견 버스투어'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인재중개(橋渡し) 사업'의 일환
- 2009년 8~12월 사이에 '지역매력발견 버스투어'를 통해 8명을 채용했고, 2010년도 졸업자 가운데 6명을 채용할 예정
- 야나기모토 추지 사장은 "지금 다른 비용을 삭감해서라도 인재 확보에 비용을 쓰고 싶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확보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힘

(자료: 日本 中小企業廳(2010. 4.). 『中小企業白書 2010』.)

2. 고용친화형 대학 육성

취업률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

□ 기업의 인력수요를 교과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고용친화형 대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 최근의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률 90% 이상인 전문대학, 80% 이상인 4년제 대학들이 존재
- 취업률 우수대학의 공통 특징은 취업을 대학교육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점
 -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 채용, 특성화 전공 및 교과목 개설,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과 사회진출의 괴리'를 해소

대학은 전공특성화와 실용교육을 병행하는 교육시스템을 지향

□ 대학역량에 따라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개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구체적인 취업 및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특성화 전공정책으로 취업률을 제고할 필요
 - 경운대는 IT 멀티미디어, 보건복지, 경찰행정 분야에 집중해, 취업률과 직무 및 전공 일치율의 상승을 실현
 - 건양대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제약공학과, 운동처방학과, 병원관리학과 등 의료 관련 학과를 개발하여 특성화하는 한편 뚜렷한 취업 및 진로 목표를 가진 학과를 개발하여 높은 취업률을 유지
- 장기인턴십 및 Co-op(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학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해외기업 협약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
 - 장기인턴십의 경우 기업수요에 적합한 실무경험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과 기업에 유용한 프로그램
 - Co-op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으로서 학생은 현장실습을, 산업체 인력은 겸임교수로 강의에 참여해 학생의 취업역량을 개발
 - 성균관대는 매년 이공계 학부생의 16%인 600여명이 Co-op에 참가하고 있으며, 해외기업과의 Co-op에도 70~80명이 참가
 - 해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고 해외취업을 지원
 - 영진전문대는 일본과 중국,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협약반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출
 - 2009년도 2월 졸업자 133명이 미국(12명), 일본(78명), 중국(32명), 사우디아라비아(11명)에 취업
- 전공별로 '산업현장 적합도 평가'를 통해 매년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수요자 만족형 인재를 배출
 - 대학은 산업 및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 편의로 학과 증설에 치중하는 상황²⁰⁾

²⁰⁾ 평균 학과 수가 1990년 37.5개에서 2008년 61.6개로 1.6배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전공을 조정하지 않고 신규전공만 신설했기 때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고등교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산업현장과 전문가의 니즈 변화, 미래 유망산업 전망 등을 토대로 전공 및 교과과정을 개편

정부는 고용친화형으로 대학구조를 개편

□ 국가산업단지에 대학을 입주시켜 산학일체형 인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및 지역 산업에 공급

-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는 경제개발 시기의 생산형 산업단지 개념으로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미흡
 - 산업단지의 열악한 환경과 인재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현상유지 내지 쇠퇴를 거듭하고 인재들은 이를 외면하여 악순환이 반복
- 국가산업단지에 대학을 입주시키고 대학 내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연구소를 집적시켜 산학협력을 일체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 설립된 대학은 시화·반월공단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유일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산업단지 내 인력공급,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취업 등에 있어서 성공 모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성과(2008년)²¹⁾

취업률		산학협력			
순수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가족회사	현장실습	엔지니어링 하우스	대학 내 기업부설 연구소
85.4%	70.1%	3,356개	1,695개 기업에서 2,800명 실습	152개 기업과 41개 분야를 공동 연구	17개

자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부자료

²¹⁾ 엔지니어링하우스는 대학 교수, 학생,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대학 내 산학일체형 복합건물 공간이며, 가족회사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개발, 학생의 현장연수, 실험 실습장비의 상호활용 등을 위해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

-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등 대도시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형 고급직업대학(Advanced Vocational School)'을 설립
 - 청년층의 도시지역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광역시의 산업 집적지에 토털비즈니스(total business) 개념의 전문직업대학을 신설
 - 예를 들어 동대문 의류시장에 창업(SOHO), 디자인과 생산, 마케팅 및 판매, AS 전문인력 양성대학, 구로디지털단지에 IT 벤처창업,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인재양성 대학 등을 설립(빌딩형 캠퍼스도 가능)
 - 도심형 고급직업대학에서 기업의 중견관리자와 CEO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도 강구
- 특성화된 '강하지만 작은 교육중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
 - 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 선호도, 수학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모든 학생이 소위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
 - 기업도 최첨단의 고급인력뿐 아니라 기반 및 중간기술 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요구
 - 대기업이 원하는 인력 중 최첨단 고급인력은 25%, 기반 및 중간 기술 인력은 75%이며 중소기업도 유사
 - 진출 분야별, 인재 역량 수준별로 다양한 소규모의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
 - 소규모 대학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 역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

'강하지만 작은 교육중심대학' 사례

	한동대학교	건양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세명대학교
유형	글로벌 고급실무 인재육성형	특성화 학과 집중육성형	실용인재육성형	기반인력육성형
재학생	3,400명	6,800명	3,500명	7,000명
주요 특성	실무형 글로벌 역량 집중 육성, 기초가 튼튼한 학부 교육	대학-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공 (임상병리학과, 국방공무원학과 등)	실무 및 현장밀착형 교육을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배출	사회 및 기업 현장에 기여하는 미드필드형 인재양성
성과	높은 대기업 취업률, 세계 유수의 대학원 및 로스쿨 진학	임상병리, 작업치료, 국방공무원, 안경 광학 등은 취업률이 90% 이상	대기업, 공기업, 중견 기업 등에 90% 이상 취업(정규직 취업률도 80% 이상)	총 40개 학과 중 취업률 80% 이상이 27개(67.5%)

3. 기업 연계형 평생교육 지원

□ 중소기업은 청년인력 유치를 위해 직원들의 학자금 지원을 기업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극 도입

- 중소기업은 대학 학자금 제도를 통해 실력은 있으나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이 어려운 고졸 청년층 인재를 유치
- 대졸 출신 직원의 경우 대학원 진학을 지원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으로 양성
- 학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직을 금지하는 고용 계약을 도입

□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 중소기업의 근로자 학자금 지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인력개발비용의 3%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기업의 인적투자 인센티브로는 미흡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7. 20	7. 21	7. 22	7. 23	7. 26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205.70	1,204.60	1,204.00	1,198.80	1,191.10
	엔/달러(뉴욕시장)	86.705	87.290	86.930	87.145	87.535
	달러/유로(뉴욕시장)	1.2939	1.2892	1.2769	1.2899	1.2889
금리	회사채(3년AA-, %)	4.85	4.81	4.76	4.78	4.80
	국고채(3년, %)	3.92	3.87	3.82	3.85	3.88
	CD (91일, %)	2.63	2.63	2.63	2.63	2.63
	LIBOR (3개월, %)	0.51250	0.50625	0.49781	0.49313	0.48750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73.16	73.66	72.43	74.58	73.68
	WTI(S, \$/배럴)	77.27	76.30	79.04	78.84	78.91
	CRB 현물가격지수	421.87	424.81	..	428.27	429.83
주가지수(KOSPI, 증가)		1,736.77	1,748.78	1,735.53	1,758.06	1,769.07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114	111	111	106	..

< 월별 지표 >

	2008년	2009년	2010.2월	2010.3월	2010.4월	2010.5월	2010.6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3.4	-0.9	19.6	23.6	20.7	22.3	..
평균가동률	77.5	74.6	80.3	82.4	82.2	82.8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6	2.0	7.3	5.5	3.7	3.8	..
실업률	3.2	3.6	4.9	4.1	3.8	3.2	3.5
실업자(만명)	76.9	88.9	116.9	100.5	93.4	79.3	87.8
총취업자 수(만명)	2,357.7	2,350.6	2,286.7	2,337.7	2,392.4	2,430.6	2,428.0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2.8	2.7	2.3	2.6	2.7	2.6
생산자물가 상승률	8.6	-0.2	2.4	2.6	3.2	4.6	4.6
생활물가 상승률	5.4	2.1	3.4	2.9	3.0	3.0	2.8
수출(억달러, FOB) ²⁾	4,220.1	3,635.3	330.4	374.2	393.6	390.3	419.2
(증감률)	(13.6)	(-13.9)	(30.1)	(34.2)	(29.8)	(40.3)	(30.1)
수입(억달러, CIF)	4,352.8	3,230.9	310.1	355.2	354.6	349.0	354.9
(증감률)	(22.0)	(-25.8)	(37.2)	(48.5)	(42.6)	(49.1)	(38.2)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699.9	2,706.6	2,723.3	2,788.7	2,702.2	2,742.2

1) 통계청 (2010. 6. 30.) “2010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7. 15.) “2010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GDP 성장률 ¹⁾	2.3	0.2	-2.2	1.0	6.0	8.1	7.2
민간소비	1.3	0.2	-1.0	0.7	5.8	6.3	3.7
설비투자	-1.0	-9.1	-17.3	-7.0	13.3	29.9	29.0
건설투자	-2.8	4.4	5.1	4.4	5.0	2.3	-2.7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38.5	53.2	48.9	52.6	53.2	51.9	52.7
SERI 경제행복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0.754	0.665	0.635	0.638	0.665	0.741	..
개인금융자산(조원) ²⁾	1,683.7	1,946.5	1,833.2	1,914.8	1,946.5	1,998.0	..
개인금융부채(조원)	802.3	854.8	818.9	836.8	854.8	863.6	..
재정수지(조원)	11.9	-17.6	-28.0	-25.7	-17.6	-7.0	..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31.0	104.0	105.6	13.4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³⁾	3,779	4,019	3,786	3,974	4,019	4,098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0.4	-2.4	-0.7	2.2	5.6	2.7	..
	실업률 ²⁾	5.8	9.3	9.5	9.8	10.0	9.7	9.5
	소비자물가 ²⁾	3.8	-0.4	-1.4	-1.3	2.7	2.3	1.1
일본	GDP 성장률 ¹⁾	-1.2	-5.2	6.9	0.4	4.6	5.0	..
	실업률 ³⁾	4.0	5.1	5.3	5.3	5.2	5.0	5.2
	소비자물가 ³⁾	1.4	-1.4	-1.8	-2.2	-1.7	-1.1	-0.9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0.6	-4.1	-0.1	0.4	0.1	0.2	..
	실업률 ³⁾	7.5	9.4	9.4	9.8	9.9	10.0	10.0
	소비자물가 ²⁾	3.3	0.3	-0.1	-0.3	0.9	1.4	1.4
중국	GDP 성장률 ¹⁾	9.6	8.7	7.9	9.1	10.7	11.9	10.3
	실업률 ²⁾	4.2	4.3	4.3	4.3	4.3	4.2	..
	소비자물가 ²⁾	5.9	-0.7	-1.7	-0.8	1.9	2.4	2.9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3) 2010년 2분기 일본,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일본 소비자물가는 2010년 5월 기준